

갈등조정특위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참여정부의 경제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참여정부의 전략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이 중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과 면에서 본다면 공정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이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인데,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이르기 전에 대체로 갈등의 80, 90%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 뒤 약간 남은 것을 표결처리하는 것이죠. 민주사회라는 것은 다수결사회이긴 하지만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개 4대 6, 49대 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합의는 고사하고 표결도 안 되는 사회라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전략의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

리 경제는 양적으로 많이 벌리면 성장하는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97년에 한계에 도달했고 모두가 질적 변화로 돌아 가야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경제의 질적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질적 변화과정이 혁신입니다. 참여정부는 혁신과 인재양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발전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중요합니다.

찬성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넷째는 세계화입니다.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습니다. 개방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수준은 3000억 달러 수출 달성했는데, 이런 역량을 세계로 넓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성공은 어렵습니다. 물론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 합니다. 낙오하는 사람은 경쟁의 무대로 올려 보내고 올라가기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전 2030에 들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인 것입니다.

균형발전위에서 핵심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가 지속가능위원회입니다. 사회갈등조정을 해소하고 극복해 가는 사회적 문화, 제도 토대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 잘 할 데가 지속가능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맡은 일이 중요한 부분이니 잘 부탁드립니다.